

균형과 내실 있는 충남경제육성

박종찬 |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경영학부 교수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경제의 성장엔진으로 반도체, LCD, 자동차, 철강 그리고 석유화학 중심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와 수출을 견인해온 충남경제는 민선5기 새로운 선장을 맞이하여 “충남경제의 양적 성장을 질적 성장”으로 전환시킬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 동안 충남 경제는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인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첫째,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는 충남의 지역경제와 충남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본사가 수도권에 있고 고용 없는 성장을 해온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는 일자리 창출과 조세기여도 측면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제한 적일 수밖에 없었다.

둘째, 과거 10여 년 동안 충남에 자리를 잡은 대기업은 모두 수도권과 가까운 충남의 서북부 권역인 천안, 아산, 당진 그리고 서산 등에 자리를 잡으면서 충남도내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셋째, 수출 중심의 대기업 중심 산업구조는 중국 경제에 대한 지나친 의존과 세계적 경제위기에 수출이 급감하는 등 글로벌 경기변동에 취약한 한계를 갖고 있다.

넷째, 수출 주도의 대기업 중심 산업구조는 지표상으로는 충남경제가 비약적 발전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내실 면에서는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낮은 편이다.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의 선순환 측면에서 높은 편이다. 하지만, 대기업과 단순 하청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이 많은 충남의 경우는 자생력을 갖고 있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육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충남경제와 마찬가지로 한국경제의 거시경제적 측면에서도 양적 성장은 이제 한계에 달하여 한국 경제 전반적으로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경제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경제성장은 노동, 자본 그리고 생산성 증가의 세 요소로 구성되는데 한국경제는 이 세 요소 모두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첫째, 노동의 성장은 육아와 교육의 어려움으로 세계 최저의 출산율인 1.15%로 떨어져 노동의 증가로 인한 경제 성장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조만간 노동력의 감소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가 심해질 것이 우려된다. 더구나, 제조업 보다는 서비스업을 선호하는 사회적 현상으로 제조업에서는 사람구하기가 더욱 더 어려워져 제조업의 성장에 따른 경제성장은 더욱 더 어려워지고 있다.

둘째, 자본의 증가에 의한 경제성장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한국경제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비약적 성장을 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은 대규모 택지와 공장 부지의 개발 그리고 제조업에 대한 설비투자가 주요인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임금의 상승, 지가의 상승 그리고 중국 경제의 발전에 따른 중후장대형 산업의 중국 이전으로 더 이상 국내에서는 대규모 공장 설립과 자본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셋째, 생산성 증가에 따른 경제성장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의 OECD 산업 선진국의 경험을 보면 노동과 자본의 성장이 둔화된 상황에서는 연구개발과 과학기술의 발전을 토대로 같은 노동과 자본을 투입하고도 더 높은 부가가치 제품을 만드는 제조업 내에서의 산업구조고도가 이루어지거나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산업구조를 전환하여 경제성장률을 제고시켰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노동과 자본의 성장이 급격히 둔화되는 상황에서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가 해체되었다. 그 대신 4대강 사업을 비롯한 대규모 토목 사업 중심의 단기적인 경기부양이 경제정책의 핵심이 되고 있어 잠재성장률을 깎아 내리고 있다. 이러한 정책으로는 생산성 증가에 따른 미래의 경제성장을 상승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에서 분석해본 것처럼 한국경제는 노동, 자본 그리고 생산성 증가 세 요소 모두가 문제점이 있어, 거시경제 측면에서 성장률 상승에 대한 기대를 어렵게 만든다.

충남 경제는 수출 대기업 중심의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를 갖고 있어서 대한민국의 산업구조와 거시경제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충남경제의 양적 성장은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충남의 지역경제는 이명박정부 들어 추진한 수도권규제 완화 정책으로 민선4기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는 수도권 이전기업의 충남 유치도 급감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수도권 중심, 대기업 중심의 규제완화 정책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어지기 때문에 공장설립과 설비투자 증가 등 자본의 증가에 의한 충남경제의 양적 성장은 더욱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노동 증가에 의한 충남경제의 양적 성장도 인구의 고령화 비율이 높고 지역평균 출산율이 1.5% 아래로 떨어진 충남으로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원천기술개발 그리고 고부가가치 부품소재 산업의 육성을 통한 생산성 증가에 따른 경제성장도 대기업의 단순 하청구조 아래에 있는 충남의 중소기업으로서는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 문제이다.

이렇게 충남경제 성장의 세 요소인 노동, 자본 그리고 생산성 증가 모두 문제점을 갖고 있어 민선5기 충남 경제의 양적은 기대하기 힘들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에서 분석한 한국경제와 충남경제가 직면한 문제점에 따라 민선5기 충남경제는 “그 동안의 양적 성장에서 균형 있고 내실 있는 성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첫째, 이제는 대기업 유치보다는 중소기업 유치와 중견기업 육성을 통해 지역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이루어낼 수 있는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산업구조 측면에서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는 일자리 창출의 한계를 갖게 된다. 통계상으로 보면 최근 10여년간 일자리 창출은 대기업은 축소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따라서 미래 충남의 산업구조에서는 충남에 본사를 둔 기업으로 부품소재 부문에서 원천기술을 갖고 있고 자생력이 있으면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중견기업을 육성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둘째, 충남도내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기업유치와 산업정책의 방향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내포문화권을 중심으로 한 충남농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농수산업의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충남은 인구의 고령화가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높은 편이다. 따라서 충남의 고령화를 활용해 미래성장산업인 의료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통해 노인복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고용창출을 통해 경제성장도 이룩해야 한다.